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법과 사회)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⑤ 2. ④ 3. ① 4. ⑤ 5. ② 6. ⑤ 7. ② 8. ① 9. ② 10. ③
11. ④ 12. ③ 13. ④ 14. ④ 15. ② 16. ⑤ 17. ⑤ 18. ③ 19. ② 20. ⑤

1. 배분적 정의 이해

정답 해설 ⑤ 배분적 정의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가치가 다를 경우 그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권자의 범위 확대와 최저 생계비 상향 조정 등은 경제적인 차이를 근거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해당한다. 을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 세금 징수 등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① 누진세 제도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세율을 달리 매기는 것으로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갑의 입장에 가깝다.

② 갑은 남을 돕기 위해 세금 부담을 감수하는 것에 반대한다. 즉, 개인이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저소득층을 돕자는 입장이므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④ 을은 자유 경쟁의 보장보다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2. 법의 일반 원칙 이해

정답 해설 ㄴ. 민법과 상법의 관계에서 민법은 일상적인 개인 간의 관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반법, 상법은 상거래 관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특별법이다. 법정 이율에 대해 민법과 상법이 서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상법의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

ㄷ. 새롭게 개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갑에게는 이 원칙에 따라 상법상 법정 이율이 7%로 개정되더라도 그 효력 발생 전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률 규정인 6%를 적용한다.

오답피하기 ㄱ. 상법과 민법은 둘 다 법률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ㄷ.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앞서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법이 새롭게 개정되더라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3. 법의 분류 이해

정답 해설 ① 공소 제기, 증거 재판 등은 형사 재판에 관련되므로 그림의 법률은

형사 소송법이다. 형사 소송법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규정한 절차법이다. 절차법은 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다.

오답피하기 ② 일반법인 형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법으로는 군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군형법, 소년범에게만 적용되는 소년법 등이 있다.

③, ⑤ 정부가 사인들의 생활 관계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법은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 격차, 노동력 착취, 소비자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④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에 해당한다.

4. 소년법의 처리 이해

정답 해설 ⑤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촉법 소년, 우범 소년, 범죄 소년이다. 을은 만 16세로서 범죄 소년, 병은 만 13세로서 촉법 소년이다. 둘 다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민법의 성년 의제 조항은 민법에서만 적용된다. 갑은 만 18세로서 범죄 행위를 했으므로 민법의 성년 의제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 법원에서 형벌을 받거나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소년법상 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다. 갑은 만 18세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③ 병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미성년자이다. 형사 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 일 경우에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④ 갑은 만 18세, 을은 만 16세이므로 모두 범죄 소년에 해당한다. 범죄 소년은 형사 법원에서 형벌을 받거나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② 이 사례에서는 학교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학교 측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배상 능력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갑과 그 부모의 배상 능력은 학교 측의 손해 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피하기 ① 사고 발생이 예측 가능한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학교 측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③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학교 일과 시간이고, 장소가 학교나 그와 관련된 교육 활동 공간이었다면 학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

④ 갑의 분별 능력이 약하고 평상시의 성행이 불량했다면 학교 측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도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⑤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 합당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6. 노동 쟁의 조정 신청서의 분석

정답 해설 병 : 노동 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상태이다. 근로 조건에는 임금, 근로 시간, 복지, 해고 등이 포함된다.

정 :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 당사자가 수락하면 노동 쟁의가 해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조정된 사안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오답피하기 갑 : 노동 쟁의의 조정은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노사가 합의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중재이다.

병 : 노동 쟁의 조정은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해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때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된다.

7.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해

정답 해설 ㄱ. 갑이 만 8세로서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진다.

ㄴ. 을이 갑의 행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갑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갑의 부모가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갑의 행위를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ㄷ. 갑은 만 8세로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지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갑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8. 권리의 종류 이해

정답 해설 ① 갑이 내 집을 장만하여 등기필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즉, 갑은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자기 집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소유권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법상의 권리란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③ 을이 작곡한 신곡에 대한 권리는 자신의 창작성이 깃든 것이므로 저작 재산권에 해당한다.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④ 저작 재산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⑤ 소유권은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기간과 사후 50년간 존속된다.

9. 유치권과 질권의 구분

정답 해설 : ② 을이 갑의 손목시계에 대해 갖는 권리는 유치권이다. 을은 갑의 손

목시계 수리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보관만 할 수 있다. 그 손목시계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오답피하기 ① 유치권이나 질권 모두 채권 담보의 필요에 따라 권리자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점유할 뿐이다. 점유자인 갑과 병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③ 을은 갑의 손목시계를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된다.

④ 정은 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병의 도자기를 담보로 했으므로 도자기에 대한 담보 물권을 갖는다. 도자기는 동산이므로 정이 갖는 권리는 질권에 해당한다.

⑤ 정은 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도자기를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이해

정답 해설 ③ 갑은 만 18세로서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므로 갑이나 그의 부모가 취소하거나 추인할 수 있다.

② 갑의 부모는 갑이 미성년자이며,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위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문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했다면 성년으로 의제되어 행위 능력자가 된다. 따라서 갑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11. 가족 관계의 분석

정답 해설 ㄴ. D는 F의 계모로서 혈족(C)의 배우자이다. 따라서 법률상 인척 관계에 해당한다.

ㄷ.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입양 당시 만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ㄱ. C가 사망하면 C와 D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다. 따라서 A와 B에 대한 D의 부양은 친족 부양 의무로 바뀐다. 친족 부양은 생계를 같이해야 발생한다. 여기서 D는 A, B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부양 의무가 그대로 존재한다.

ㄷ.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C와 D가 재혼한 상태에서 G가 C의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 D와의 관계는 유지되지만, 친생모 E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12. 상속 관계의 파악

정답 해설 ③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예금 20억 원 중에서 채무 6억 원을 공제한 14억 원이 C의 상속 재산이다. C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배우자 D, 직계 비속 F와 G이다. 배우자 D는 1.5/3.5, F와 G는 모두 1/3.5의 비율

로 상속되므로 D는 6억 원, F와 G는 각각 4억 원씩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① C의 상속인은 D, F, G이다.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므로 C의 직계 존속 A는 유증이 있든 없든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② B는 C의 직계 존속이므로 상속인이 아니다.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 청구권도 갖지 않는다.

④ C의 상속 재산 14억 원 중에서 F의 법정 상속분은 4억 원이다.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C의 상속 재산 14억 원이 D에게 유증된다. 이때 F는 G에 대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 4억 원의 1/2인 2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⑤ G는 친양자이므로 C의 상속인이다.

13. 교육의 중립성 이해

정답 해설 ④ 제시문은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대해서 특정 종교 교육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사립 학교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 교육이 가능하다.

② 교육이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③ 교육에서의 과당적 편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찬성을 위해 학생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⑤ 정치적·과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만 아니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원이 교육 과정의 편성과 교육 방법의 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14. 취업 동의서의 분석

정답 해설 나.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나 정규직 근로 등을 구분하지 않고 연소자의 근로에는 보호자의 취업 동의서가 필요하다.

ㄴ. 연소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이다. 그러나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가. 연소자라도 본인의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 갑은 을의 보호자이므로 사용자 병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ㄷ. 누구든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 계약이 필요하다. 연소자는 보호자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 본인이 직접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5. 법치주의의 이해

정답 해설 가.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 어떻든 법의 형식만을 강조한다. 시소속 업무용 차량을 단속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ㄷ. 법 앞의 평등 원칙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 소속 업무용 차량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차량만 단속한 행위는 공평한 법 적용이 아니므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오답피하기 ㄴ. 시민들의 차량에 대한 단속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행위로서 유효하다. 시 소속 업무용 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이지 그로 인해 시민들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ㄷ. 주차 단속 면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 소속 업무용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는 근거가 없다.

16. 실종 신고의 이해

정답 해설 ㄷ. 병이 재난에 의해 실종된 것은 아니므로 보통 실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종 기간은 5년이다.

ㄴ. 병에게 실종 신고가 내려져서 사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중에 살아서 돌아왔으므로 실종 신고의 효과를 없애려면 실종 신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간주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무조건 부여하므로 반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번복되지는 않는다.

오답피하기 ㄱ. 갑과 을 중에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에 해당하므로 추정과 다르다.

ㄴ. 실종 신고의 청구는 가정 법원에 해야 한다.

17. 임대차 관계의 이해

정답 해설 ⑤ 병은 갑의 B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 변제 요건을 획득했다. 이후에 은행이 갑의 B주택에 대해 저당권자가 되었으므로 병은 은행보다 선순위 권리자이다. 따라서 경매 시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② 은행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의 B주택을 담보로 하였으므로 B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갖고 있다. 갑이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B주택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다. 이때 낙찰자가 B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을은 갑의 A주택을 빌리면서 전세권 등기를 하였으므로 A주택에 대해 전세권이라는 용익 물권을 갖고 있다. 용익 물권은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만 할 수 있다.

④ 병은 갑의 B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다. 병이 갖는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이라는 채권 보호를 위한 장치이다. B주택에 대해 갖는 용익 물권이 아니다.

18. 근로 기준법의 이해

정답 해설 제시된 법은 최저 근로 조건, 감독 관청의 근로 감독 실시 등을 규정하

고 있는 개별적 근로 관계법이므로 근로 기준법이다.

③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 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①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 것으로 그 유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서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해산 사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⑤ 근로 조건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19.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이해

정답 해설 ㄱ.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정의에 반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되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ㄴ. 법이 개인들에게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경우 그 법을 무효로 본다면 그 법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오답피하기 ㄴ. 자연법론은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질서의 자연법을 중시한다.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정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이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ㄷ. 법실증주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자연법이 실정법의 정당성의 평가 기준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20. 이혼의 종류 이해

정답 해설 (가)와 (나)는 이혼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 절차, (다)와 (라)는 이혼 의사가 불합치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이다.

⑤ 재판상 이혼은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혼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협의상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 신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협의상 이혼이므로 이혼의 이유나 동기와 관계없다.

②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③ 이혼 의사 확인 신청과 이혼 소송 제기는 모두 가정 법원에 한다.

④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해소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